

'안전하고 깨끗한 전북 실현'

민주 김윤덕 도지사 경선 후보, 도시시설 직속 재해재단 모니터링 구축 등 5가지 제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가 "살기 좋은 포용 도시, 안전하고 깨끗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시설에 실시간 디지털 트윈 재해재난 모니터링 구축, 새만금 해수유통 등 안전과 발전이 공존하는 전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내용으로 ▲안전사고 즉각 대응을 위한 도시시설 직속 재해재단 모니터링 구축,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자치연급 도입, ▲장애인·어르신·아동 등



도시시설에 디지털 트윈 재해재단 모니터링을 구축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허송세월만 보내는 새만금에서 즉각적인 해수유통을 통해 친환경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조

력·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업유치, 해양리조트 사업 등 친환경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형 마을자치연계를 도입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또한, 장애인·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정든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플랫폼을 도입해 맞춤형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후보는 "서남대를 활용한 공공의료 및 간호대학을 설립해 차세대 공공건강증진의 표준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와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을 그린뉴딜·생태관광 중심지로'

안호영 도지사 경선후보, 새만금살리기 공동행동과 정책 협약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와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21일 정책협약을 맺고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유통에 기반한 새만금기본계획의 조속한 변경과 민간 거버넌스가 주축이 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을 공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상임대표 김중주 등 7명)이 제안하

는 '새만금분야 9대 정책'을 오는 6·1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에서 정책 공약화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새만금 수질 2급수 달성,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육성, ▲새만금 내 2000ha 양식단지 조성 및 수산업 복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국내 최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또 ▲농생명용지 놓여진 우선 분야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사회경제적특구 조성, ▲해수유통 기반 새만금기본계획의 조속한 변경, ▲단계적 완성형 개발추진전략 마련 등도

합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의 정책협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사업이 될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새만금사업 대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도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안호영 전북지사 경선후보에게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안 후보가 소통행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경제 살리려면 정치부터 혁신해야'

김관영 도지사 경선후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후보가 "전북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압도적 승리 지원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21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전북경제 살리려면 정치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대표해 전북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도지사인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전북경제를 살리려면 '젊고 유능한 경제도지사'로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전북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전북의 변화를 주도할 도지사나 전북을 퇴행시킬 도지사나,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전북은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라며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뽑아야 전북경제를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전환시킬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 도지사 경선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조직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와 구태정치로 재판을 드는 이번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살포하며, 경선을 진흙탕

으로 만들고 있다"며 "TV 토론에서도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했다. 이런 나쁜 정치, 저질 정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경선후보는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대통령과 혁신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 힘으로 전북정치를 바꾸고, 전북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뛰겠다. 더 낮은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반드시 구태정치와의 싸움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며 "노약하는 전북시대의 문을 여는 도지사가 되어 도민을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민이 바라는 바람... 당신이 주인공" 전주지역 청년 1004명(사진 왼쪽)과 전주지역 노무사들이 21일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지역 청년 1004명(사진 왼쪽)과 전주지역 노무사들이 21일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들,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재선택'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 관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확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확정 조제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

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30.)까지,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확정 조제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월 29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조제를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거구획정 조제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며 "아울러, 재비후보자도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조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선거구인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련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

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하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공무원의 자제에 공평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일상 회박의 '치름길'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추경예산 원안 가결

4조719억원 규모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가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719억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 예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후 추가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대응 179억 원, ▲사람유치원 한시적 지원 6억 원(원당 500만원, 122개원), ▲학교시설/학교증설 88억원, ▲식생활관 환경개선에 76억원(20개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액분 79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700억원 등으로 균형있는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도약이 기대된다.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이 본예산 대

비 5.4% 증가한 만큼 신규·증액 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사업 편성의 적정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소홀을 지적하면서, 전북의 교육여건 개선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의회 제4기 예결특위는 금번 도 교육청 제4회 추경예산 심사까지 총 4회 동안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 심의를 완료했다.

김정수 위원장(의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학교방역, 돌봄 등 교육위기를 잘 극복해준 교육가족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난 1년간 민생회복자금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교육결손 해소 등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준 동료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최찬욱 전북도의회이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봉사의 길 찾고 후배에 도움 줄 것'

최찬욱 도의원, 전북 최장수 의원으로 은퇴

전주시의원 6선, 전북도의원 1선 등 전북 지방정치계 최장수 의원으로 불리는 최찬욱 도의원(전주10)이 25년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인생을 마무리 하고 후배 양성의 길로 나선다.

오는 6월 제11대 전북도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최찬욱 의원은 21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1994년 시의원 보궐선거로 첫 당선된 후 25년여가 흘렀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솔선수범하고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봉사의 길을 찾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현재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논문 과정을 마무리하고 강연 등 힘 닿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찬욱 의원은 1994년 제4대 전주시의원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후 5, 7, 8, 9, 10대 전주시의원을 역임했으며 8대 후반에는 의정직을 수행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